## 한국사회 총체적 분열…保-革 대립 격화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사회의 보수·진보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통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발언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정·보완 유지” vs “즉각 폐기돼야”

### ■ 포용정책 중지 논란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사회는 극도의 분열상을 노정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포용정책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극단적 논란은 물론, 북 핵실험 사태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미국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과 정부·여당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여권은 일단 대북 포용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경협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한명숙 국무총리도 대북 포용정책이 과소평가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대북 포용정책의 역사적 당위성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남북 공조보다 국제공조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포용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대북 포용정책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했으므로 폐기해야 하며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핵포용정책이냐”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틀린 말이며 선택은 제재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의 중단이 불가피하고 남북관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군사충돌 뇌관 될수도” vs “즉각 참여 제재 나서야”

### ■ PSI 참여 확대 논란

대북제재 조치의 하나인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참여 확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의장은 12일 정부 고위 당국자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북핵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PSI 참여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남북대화의 기회를 잃고 해상충돌 가능성이 확대돼 우리 경제에 미증유의 충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PSI 참여는 군사 충동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PSI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였던 정부도 여당의 반발을 고려한 듯 “PSI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PSI 참여 확대 여부는 앞으로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우선 제재와 PSI 즉각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제재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황우여 사무총장도 “정부는 때가 늦기 전에 단계적 제재 조치에 나서야 하며 PSI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경 일변도 핵실험 불러” vs “국가적 위기 책임 회피”

### ■ 미국 책임론 공방

북한 핵 실험 이후 미국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으로 수세적 입장에 몰렸던 여권은 미국 책임론으로 상황 반전을 모색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책임회피’라며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부시 정권 이후 북한에 강경일변도 태도를 취해왔고 그 결과 북한은 핵을 실험했다”고 말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핵실험 사태를 둘러싼 책임 논란과 관련,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책임론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위기에도 남 탓만 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으로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만 돌리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대북 결의안 통과

### 국회 4일 진통끝 가결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재적의원 297명 중 18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통외통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돼 본회의로 넘어온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관련 계획을 철폐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단호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는 한편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對北 제재 일변도 제동?

### 오늘 한·중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13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이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간 북핵외교 1라운드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대북제재보다는 ‘제재·대화 병행론’을 펼치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이 도출할 ‘조율된’ 결과의 성격과 강도가 결의안 내용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10.9 북한 핵실험 발표’ 직후의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 이은 것으로, 당시 노 대통령과 미·.일 정상은 유엔과 관계 당사국간 긴밀히 협의해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일본→미국→중국’ 정상과의 연쇄접촉이 이뤄짐으로써 핵실험 사태 발생 만 나흘만에 핵심국가들과의 긴급 조율이라는 발 빠른 대응을 한 셈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서자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해온 미국과 일본의 정상과는 핵실험 발표 당일 서둘러 의견조율 절차를 거침으로써 일단은 긴장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핵 상황이 생겼을 때 안보 또는 정세와 관련한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두 나라 정상이 핵실험 이후에 처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30분간 예정됐던 단독정상회담 시간을 45분으로 연장해 핵실험 후속 대책을 집중논의키로 한 점도 양국 정상이 이번 핵실험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주말이나 내주에 회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물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입장을 감안하면 그 논의의 방향은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 대처방안에 대해 일정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가 적어도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선박봉쇄 등의 조치나, 그 가능성은 낮지만 무력사용을 결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도 북한과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 대통령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재는 물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대북 해법 찾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물론 여기서 제재란 무력사용 등을 배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 “美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를”

### 전직 장관 등 軍원로 17명 촉구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들이 12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군의 전술핵 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은 전 장관을 비롯한 14명의 전직 국방장관과 박세직 향군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군원로 17명은 이날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하고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됐으며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제 한반도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군사력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게 됐고 그 결과 남북간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됐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공갈에 꼼짝없이 끌려 다녀야 할 입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우리 경제와 안보 및 외교 면에서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고 대북 안보전략과 작전계획을 비롯한 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보불안 불식을 위해 정부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및 미국의 전술핵 한국 재배치 ▲대북 포용정책 즉각 중단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 즉각 수정 ▲정부 및 각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비상대책팀 구성 등을, 미 정부에 대해서는 전작권 조기 이양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전작권과 관련, 이들은 “북한 핵실험은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대 안보변수”라며 “단독행사에 대한 논의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문제를 의제로 삼지 말 것과 추진계획의 무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한편,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도록 미국에 강력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